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3일 (음력 6월 1일) 금요일

## “또 반쪽” 광주시의회 비주류측, 본회의 보이콧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동천(53·북구5) 의원이 1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반기 부의장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자리 나눠먹기와 패권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시의회가 이번엔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또 다시 파벌 갈등을 빚고 있다.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파행이 장기화될 지, 갈등이 봉합될 지 중대기였으나 비주류측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소용돌이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사일정이 뒤물리고 산적한 시정현안이 뒤틀림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비주류측 일각에서는 ‘선 정상화 후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갈등은 입시나마 봉

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8대 의회 첫 임시회 소집 나흘만인 12일 오전 10시 4차 본회의를 열고 4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반재신(북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측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의 절차상 하자과 승자독식 구조에 반발 본회의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상임위원 선임은 당초 지난 9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파벌 싸움과 의회공전으로 사흘이나 연기됐다. 비주류 측 보이콧으로 4차 본회의는 개의와 동시에 정회로 들어갔다. 나흘 연속 이어진 ‘개회 후 자동 정회

“현 의장 체제 인정 못해...절차적 하자 유권해석 받겠다”  
‘반쪽 의정’, 업무 보고·조직 개편 등 시정 현안 ‘빨간불’

다.

상임위 배정은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의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5명을 비롯, 환경복지위 5명, 산업건설위 6명, 교육문화위 6명을 전반기 상임위원으로 배정한다는 게 기본계획이다. 지역구와 경력, 전공은 감안하되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다.

1·2순위 선정 결과, 행정위 3명, 환경위 5명, 산업위 7명, 교문위 8명으로 상임위원별 편차가 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파벌 갈등에서 벗어나 상임위 배정이 정상 진행될 경우 오후 8시까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후보등록을 매듭 짓고, 오는 17일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어 운영위 구성과 운영위원장 후보등록을 거쳐 20일 운영위원장까지 선출해 회기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 사이 실·국 업무보고 등 미뤄온 숙제도 풀겠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빠듯하게 압축된 일정 탓에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비주류측 집단 반발로 8대 의회 첫 임시회는 시작과 동시에 표류하고 있다. 공전이 지속될 경우, ‘의회 조타수’ 격인 운영위원장과 예결·윤리위원 선임도 다음달 24일 시작되는 8월 회기나 원포

인트 의회로 넘겨질 공산이 적잖다.

특히 추경예산 결산심사 등 6월 지방선거 뒤로 밀린 업무와 민선7기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늦춰져 시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류측에 전반기 의장과 1, 2부위원장을 모두 내주고 힘의 논리에 밀려 후반기 의장도 기약할 수 없게 된 비주류측 일각에서 ‘현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론이 여전하다. 새 의장단 주도로 상임위가 어렵사리 짜맞춰진다 하더라도 임금이 남아 있을 경우 17일부터 이어질 실·국 업무보고가 ‘반토막 출석’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선을 중심으로 비주류 측 상당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다. 부끄럽다”며 “우선 상임위 활동에 참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며 의회안에서 실력으로 싸우자” “강한 집행부, 허약한 의회 리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의결이어서 의형상으로나마 의회는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좌장격인 반 의원도 “너 이상의 파행은 안된다”는 생각에 상임위에는 참가하되, 의장 선출의 절차상 하자 여부는 행정소송이든 법률자문이든 유권해석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일선 퇴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서울시정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다. 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한 일간지 기자와 만나 “국민이 다시 소화하지 않는다면 정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조건부지만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9월 무소속대선 출마선언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9년 10개월 지났지만 비록으로 차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복귀를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국민이나 나를 다시 부르지는 않더라도 정치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일선 퇴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안철수



박지원



안철수

## ‘신군부 명령 거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5·18유공자 결정

###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 지시 따라 경찰 병력 철수시켜



이 서장의 행동은 신군부에 보고했고 5·18 직후 계엄사령부에 구속돼 3개월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고문까지 당한 이 서장은 군사재판을 받고 석방

조인호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와 이 서장의 유족은 12일 이 서장이 최근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결정됐으며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13명의 경찰 간부 중 유일하게 파면을 당했다.

신군부는 이 서장이 “외곽지역선 보호와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고 평가하고 이 서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 서장은 당시 신군부의 총기 사용을 통한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경찰서에서 철수 시켰다.

이와 함께 무기가 작동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방아쇠 봉치를 제거한 뒤 선박에 실어 목포 인근의 섬으로 나뉘 옮겼다.

됐다.

목포시민들은 이 서장을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이 서장은 지난 1985년 58세의 나이로 작고했으며 현충원과 국립5·18민주묘지가 아닌 전안공원에 안장됐다.

이 서장의 사위인 윤성식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인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1993년도에 보상 신청을 했던 기록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인의 행적이 조금씩 알려져 다행이다”며 “유공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자료를 찾아 보강한 뒤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8대 고흥군의의회 개원

##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움에는

##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